

國際化 時代의 韓國과 科學技術

本稿는 지난 11월 2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한국과학
저술인협회 주최로 개최된 심포지움의 주제 발표 내용

국제화시대의 정치 · 정당과 과학기술

이 기 택
정치학박사, 연세대학교 교수

I. 새로운 국제질서와 과학기술

오늘의 국제사회와 국제정치의 전환점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의 기반이었던 「이데올로기」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과학기술주의」가 이를 「대신」해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이 국가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근대적인 산업혁명 이래로 그 어느때 보다도 과학기술이 현대세계질서에 깊은 관련과 영향을 주면서 새로운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과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 한국과 북한에게는 냉전적인 기반으로부터 「과학기술」을 새로운 국제질서에 어떻게 적응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본질적인 문제로 기반으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이미 「국가전략정책」이라는 관점에서 핵기술과 북한의 정치체제를 연결시키면

서 국가전략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깊이 인식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한국전쟁 이래로 「중공업 우선주의」 정책을 국가전략으로서 추진하여 왔으며, 오늘날 북한이 「핵정책」으로 이행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에 반해 남한은 자유세계의 시장경제와 연계되어 산업자본주의적인 성격을 띠면서 공업의 기반을 형성하여 왔다. 물론 일시적으로 박정희 정부가 「부국강병」이라는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을 국가전략 형태로 취중시켜 보려고 했던 시도가 크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권력의 단절로 인해 1980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그러한 과학기술의 집중정책은 일단 해체되어 변질 혹은 표류하여 왔다. 또한 산업적이며 시장적인 과학과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SDI로 대변되는 미국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에서 기인하는 기술보호 및 기술차단, 다시 이에 이은 일본의 기술차단이라는 보호정책에 직면하게 되면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커지게 되었다. 한국

은 이러한 사실이 한국의 국민경제의 장래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곧 우선적이며 절대적인 「중공업 우선주의」정책을 확립하고, 일제 식민지 시대가 남겨 놓았던 공업 기반을 회복한 후 「핵정책」으로 이를 완성시키려 하고 있으나, 이 역시 특히 걸프전 이래의 새로운 국제질서의 엄격함 속에서 명백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II. 과학기술과 국제정치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미소간의 이데올로기적인 대결의 실질적인 내용은 과학기술주의를 기초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의 1950년대 「스푸트니크」의 획기적인 발사는 미국의 경악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응하는 미국은 「미사일 갭」(Missile Gap)을 메꾸기 위해 국가적인 호소와 함께 대대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달나라」에 미사일을 보내게 되었다. 브레즈네프 17년간 양적인 미사일 경쟁이 지속되었으나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1979년)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미국은 「우주방위계획」(Strategic Defense Initiatives)을 추진시킴으로써 ICBM을 주축으로 하는 소련의 핵공격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미소간의 핵경쟁에서 미국이 소련을 능가한 것이다.

소련이 냉전에서 「좌절」한 것은 미국과의 과학기술 경쟁에서 좌절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이 미국의 「우주방위 계획」(SDI)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0억불의 재정투자와 시간적으로도 6~7년이 필요했던 것이다. 미국의 「우주방위 계획」(SDI)에 대한 좌절에서 기인한 완전한 포기는 오늘까지 내려온 냉전적 세계질서의 기반이었던 「이데올로기를 완벽하게 변질시킨 심층 동인이 되었던 것이다. 실제상 이번 「걸프전쟁」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군사기술의 부분적인 「적용」이었다고 말할 수 있

다. 미국은 이미 「월남전쟁」의 전쟁방식에 대한 「반성」을 통해 「노동집약」적인 전쟁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자본도」가 높고 「기술집약」적인 전쟁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출발은 이미 월남전쟁이 종료되는 「닉슨독트린」에서 시발되고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전쟁방식으로부터 「기술집약」적이며 「자본도」가 높은 전쟁방식으로의 이행이 레이건의 「우주방위계획」(SDI)을 낳은 것이다.

미소간의 과학기술 경쟁은 전후 국제질서의 기반이었던 「이데올로기」를 그 근본에서부터 「변질」시켰으며, 역으로 「과학기술주의」가 「이데올로기」를 대신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국제질서가 아직 확고하게 자리잡지 않고 있는 현금의 과도적 시기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III. 과학기술과 국가전략 · 정책

국가간의 관계에서 도리어 냉전시대에는 과학기술의 「격차」는 「양적인 격차」였다고 할 수 있다. 냉전이라는 상황과 미국의 「너그러운」 지도력에 의해 지도되는 「자유세계」라는 국제환경하에서 기술은 물과 같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온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국제사회와 국제질서에서는 「양적인 격차」로부터 「질적인 격차」를 낳게 되었고, 이러한 질적인 격차가 「국가간의 격차」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의 「혁신」(Innovation)은 선진국에서 급격한 나선형의 발전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후진국은 타성적인 「모방」, 「표절」 내지는 값싸게 「매입」하는 데 만족하여 왔으며 대신 이를 안이하게 단순한 「노동력」으로 메꾸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기술이 돌고돌아 동경에 오면 이를 손쉽게 「모방」하거나 「표절」 혹은 손쉽게 기술을 「매입」하는 타성으로 내려 온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미국은 「우주방위계획」(SDI)을 기점과 전환으로 하여 과학기술의 「차단」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모방하여 일본 역시 공업기술의 「차단」을 시작함으로써 오늘의 국가간의 엄격한 「기술격차」를 낳게 된 것이고, 오늘의 한국의 공업적이며 시장적인 딜레마에 직면한 것이다. 말하자면 과학기술의 국가간의 국가적 「격차」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제경제에서 단순한 「물건의 무역」이라는 국가간의 경제적인 관계에서 「지적자산의 무역」이라는 「지적소유권」이나 「공업소유권」에 이르는 과학기술의 「질적 격차」가 국가관계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때 「질적인 격차」라는 말은 국가관계에서 이미 지적소유권이나 공업소유권의 강화로 국가간의 「정보산업의 격차」를 낳는 그 Impact를 뜻하는 것이다.

국가관계에서 과학기술이 깊이 개입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이 국가관계에서의 단순한 경제적인 격차를 낳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격차」를 낳고 있는 것이다. 서방으로부터의 「표절」을 기초로 하였던 모방적인 소련의 기술이 미국의 「우주방위계획」(SDI)과 같은 비약적인 기술혁신에 좌절하는 예가 그 국가적 격차를 낳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우주방위계획」(SDI)을 시발하면서 동시에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등을 통하여 엄격하게 과학기술의 「보호주의」와 대공산권에 대한 「기술이전」의 엄격한 「차단」의 사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IV. 「기술패권주의」(Techno - Hegemony)의 경향과 국가전략

이러한 과학기술의 새로운 혁신적인 국가관계에 나타나는 국가적인 격차는 세계질서라는 관점에서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을 벗어나면서 「기술패권주의」적인 질서의 등장과 성격을 띠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일종의 「기술애국주의」(Techno - Chauvinism)적인 성격도 나타나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또한 이는 과학기술정책을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파악하는 「기술국가주의」를 낳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국가의 군사기술 개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도 말할 필요가 없다. 기술패권적인 성격은 물론 군사기술과의 연계를 통하여 발전되어 온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국가는 기본적인 기술혁신과 독점적인 정책을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의 「국가전략」적인 차원이라던가 이를 국가적인 「과학기술전략」이라는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마도 가장 가깝고 실감있는 예가 북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은 노골적인 과학기술과 국가전략을 강력하게 매개시키는 「핵전략」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과 「국가전략」을 직접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북한의 핵전략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딜레마를 던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질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일종의 세계적인 「기술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세계질서와 기술질서간의 관련에 대해서는 기술패권주의라는 각도에서, 따라서 필연적으로 국가와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국가정책에서 과학기술의 정책성과 전략성이 필수적인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새로이 형성되는 세계질서 속에서 새로운 세계적인 「기술질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의 세계질서와 기술질서 속에서 첨단 기술을 자기 지배하에 장악하려 하는 「기술보호주의」와 「기술패권주의」의 경향이 강력한 것이다. 오늘의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에 있어서 확실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질서를 지배하여 온 「이데올로기」를 「과학기술주의」(Technology)가 「대신」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국가간의 관계라는 국제정치에 있어서 「과학기술주의」(Technology)가 과거의 「이데올로기」를 대신하면서 질서의 기반이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

다.

한국은 한국전쟁과 1950년대 이래 「국가형성」(Nation-Building)이라는 기반을 닦으면서, 다시 60~70년대를 거치면서 「공업화」와 「산업화」라는 「근대화」를 이루어 왔다. 오늘날 한국은 국가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선진국으로 비약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전환점에 서있다. 한국의 생존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국가전략으로서의 「과학기술주의」가 그 긴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V. 과학기술과 정치·정당

오늘의 국가차원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두가지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그 하나는 새로운 국제환경의 형성에서 첨단기술을 기초로 하는 기술보호주의와 기술의 차단, 나아가서 기술패권적인 세계적인 기술질서에서 냉전의 혜택을 받아왔던 한국이 이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갖게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또 하나는 폐쇄사회라는데서 우리가 가볍게 보았던 북한의 핵기술과 핵능력에서 보듯이 북한의 과학기술 능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 문제점은 정치와 정당이 정치철학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문제들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한국의 근대화나 공업화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노동집약」적인 공업화의 성격이 그 주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순한 노동집약적인 성격의 공업화나 「수출독려형」의 통상정책 또는 전략으로 국민경제(National Economy)를 이끌어갈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이제까지는 경제정책의 과정에서 「한탕주의」적인 일시적이며 집중적인 공업적, 통상적인 노력으로 경제적인 성과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한국의 국민경제가 하나의 전환점에 이르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한국은 새로운 권력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정치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전환점에서 새로이 권력을 담당할 정치세력이나 실제적인 정치기구인 정당들은 명확하고 뚜렷한 「과학정책」을 국민앞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임박한 장래를 전망해 볼 때, 국민경제에 대한 새로운 과학정책이 제시되지 못할 때에는 권력을 담당할 정치적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세력과 제 정당들은 보다 국가장래와 국민경제라는 관점, 즉 ① 과학기술과 국민경제의 재편성, ② 과학기술과 내외의 시장경제에 대한 대처, ③ 과학기술과 국방경제, ④ 과학기술과 한단계 위의 선진형의 고도산업사회로의 진입, ⑤ 이를 종합하는 과학기술과 국가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정치세력과 제 정당들은 확고하고 합리적인 「과학기술정책」을 국민 앞을 제시해야 한다.

사실상 새로운 정치권력이나 여야를 막론한 제 정당들은 한국의 국민경제가 과학기술에 대한 자신있는 정치철학을 갖고 「제2의 산업혁명」이라는 각오를 갖지 않고서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내외에 직면하고 있는 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실제상 한반도를 지배하던 철저한 이데올로기도 세계질서의 변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국민경제의 「과학기술주의」에 의해서 「대체」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정책은 국가전략에 속하는 문제라고 본다. 그러기에 고도의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적인 정당과 정치의 인식 없이는 장래적인 국민경제의 새로운 전환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의 권력이 「과학기술」정책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다시 정체된 3류국가로 남을 것인가 하는 역사적인 책임의 문제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